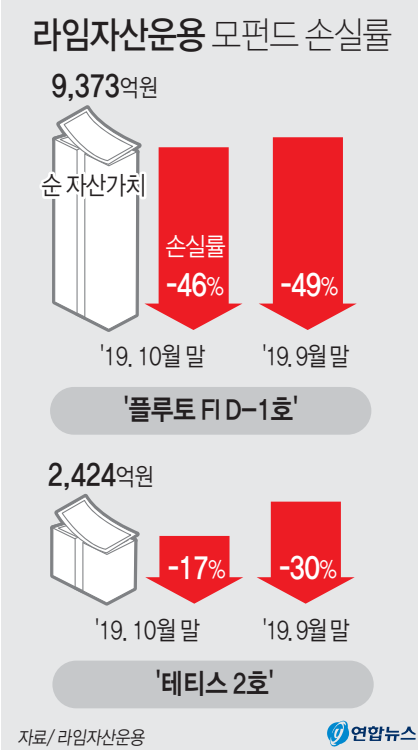


2兆 손실에도 금융당국 '나 몰라라'... 감독실패 책임론

원금손실 가능성 숨기고 판매 급급 금융위 "제도개선 탓 아냐" 선 그어 금융사들 내부통제 없이 위법행위 증권사 부실발생 알고도 고의 은폐

사모펀드에서 조 단위의 손실이 났지만 투자자들의 뭉일 뿐 책임지는 곳이 없다.

사모펀드 투자장벽을 낮춘 전문성도, 손실 감내 능력도 없는 투자자가 대거 유입됐지만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성장통으로 인식하는게 전부다.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서 수천 억원대, 연이어 운용사의 사기에 가까운 행각으로 1조원 안팎의 손실이 났지만 '일부' 사모펀드의 문제에 불과하다. 감사과정에서 불법·부실 운용이 드러났지만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차이를 이유로 투자자들은 석 달이 지나야 사태를 알게됐다. 원금손실 가능성을 숨겨두고 상품 팔기만 급급했던 불안전판매는 사고가 터질 때마다 단골손님이다.



◆“확대해석 말라”... 일부 사모펀드만 문제?

16일 금융감독원의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라임의 환매연기 펀드는 4개 모(母)

펀드와 173개 자(子)펀드로 총 1조 6679억원 규모다. 개인계좌가 무려 4035개, 9943억원에 달한다.

개인들이 국내 메자닌은 물론 해외 약속어음(P-note)과 해외무역채권까지 자산도, 구조도 생소한 상품에 수익 원씩 투자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015년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5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최소 투자금액을 5억 원에서 1억원으로 크게 낮췄고, 사모 운용사 진입 요건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꾼 바 있다. 사모펀드 설정액은 2015년 말 200조원 수준에서 지난해 말 412조원으로 두 배 넘게 급증했다. 헤지펀드 수도 지난해 1만1000개를 넘어섰다.

우후죽순으로 사모펀드가 팔렸고, 대규모 사고가 터졌지만 규제완화 탓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든 규제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후에 발생한 사고로 제도개선의 적정성 여부를 재단하기 어렵다”며 “일부 사모펀드의 문제를 제도개선의 탓으로 연결해 확대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필요 최소한”의 대책만 내놓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전히 사모펀드는 대표적인 민간 모험자본이며, 자율성을 인정해 주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모펀드 규제를 예전처럼 강화시키는 것도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제도운영 과정에서 불안전판매와 유동성 관리 실패, 운용상 위법·부당행위 등 일부 부작용을 노출한 만큼 보완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도적 허점 파고든 금융사... 감독도 실패

금융사들은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피해를 키웠다.

운용사는 금융당국이 준 자율성을 악용했다. 유동화하기 힘든 자산에 투자하면서 언제든지 환매할 수 있다고 인기몰이를 했고, 내부통제 없이 운용역의 위법행위는 반복됐다.

증권사는 운용사와 담보대출의 일종인 총수익스왑(TRS)과 계약을 맺고

수익을 얻으면서 피해규모를 늘렸다. 판매사는 사모펀드 최소투자액이 5억 원에서 1억원으로 낮아지자 예·적금에만 돈을 넣어두려던 투자자까지 끌어들이었다. 사모펀드는 판매수수료가 높다.

감독시스템도 투자자 편에서 건넜었다.

금융원은 지난해 8~10월 실시한 라임자산운용 감사에서 위법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실을 발견했다. 특히 환매가 중단된 3개 모펀드 중 하나에서는 운용사와 TRS 계약사인 신한금융투자가 부실 발생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은폐했다고 파악했다.

사기에 가까운 행각에도 금감원은 석 달간 혐의를 공개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사와 운용사 입장에서는 가급적 손실규모가 늦게 나오는 것이 유리하다”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궁금하고, 알려줘야 하는게 맞지만 이해관계자인 판매사와 운용사, 실사회계법인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늦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TRS에 꼬여 배임 논란... 배상까지는 '먼 길'

>> 1면 '아무도 책임 안지는'서 계속

이에 따라 법무법인 우리는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에서 펀드를 가입한 투자자들은 고소인으로 모집하고 있고, 이달 중 대신증권과 라임을 고소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우리는 “펀드를 판매하기 위해선 일반적으로 손실 위험을 고지하고 펀드에 대해 설명한 뒤 그 자리에서 서명을 받아야 한다”며 “하지만 반포 WM센터는 일단 돈부터 받고 몇 달이 지나야 계약서에 서명을 받는 식으로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엮혀있는 TRS 이해관계

대신증권은 지난 12일 신한금융투자,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라임 펀드에 TRS를 제공한 증권사 3곳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임펀드의 정상분배금을 일반 고객보다 우선청구하지 말도록 요구한 것이다. 이를 어겨 대신증권 고객에게 추가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증권사에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TRS를 사용한 라임 'AI스타 펀드'의 경우 전액손실이 예상된다. TRS를 사용한 레버리지 비율이 100%였기 때문이다. 증거금보다 편입자산의 가치가 더 하락한 상태다. AI프리미엄 펀드 역시 최대 78%의 손실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투자자의 손실이 불어날 것을 우려해 증권사에 TRS 회수를 자제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이에 따라 라임-판매사-증권사로 구성된 제3자 협의체 구성을 권유했으나 증권사 측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한금투, KB증권 등은 TRS를 제공한 증권사이자 판매사이기도 하다. TRS를 회수할 경우 투자자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꼴이고, 리스크가 발생한 것을 알고도 회수를 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배임이 될 수도 있다는 이해관



김정각 금융위원회 차관시장 정책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TRS 투자 여부에 따른 자(子)펀드 손실률 규모>

모(母)펀드 편입여부	TRS 사용여부	예시	기준가격 하락 (20.02.17 기준)	NAV기준 (20.02.14 기준)	NAV 하락분	펀드 수
모(母)펀드 편입	사용 안함	Top2	-48% ~ -18%	2620억원	1092억원	39개
		플루토 1Y	-48% ~ -46%	1290억원	612억원	16개
		그외	-48% ~ -0.4%	1878억원	248억원	36개
모(母)펀드 편입	사용	AI스타	전액손실예상	472억원	492억원	3개
		AI프리미엄	-78% ~ -61%	197억원	135억원	2개
		그외	-97% ~ -7%	2445억원	1438억원	24개

계에 엮혀있다.

◆투자자 보상은 '까마득'

현재 2개 모펀드의 기준가 조정은 있었으나 총 6000억원 규모의 무역금융펀드는 여전히 실사 초기 단계다. 또 2개 모펀드에 딸려있는 173개의 자펀드의 기준가 조정도 필요한 상태다. 라임은 3월 말거나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투자자 보상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우선 '플루토 FID-1'의 경우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자산은 전체 22.9%에 불과하다. '테티스 2호'는 고작 9.5%다. 적어도 대부분의

자산 만기가 돌아오는 2023년은 돼야 정확한 손실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송 기간 역시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민사 소송의 경우 사건 관련자들의 형사판결이 나와야 소송을 시작할 수 있다. 더욱이 사건 관련자 중 한명인 이모라임 전 부사장은 잠적 상태로 수사를 시작도 하지 못했다.

일부 법무법인은 소송보다 분쟁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분쟁 조정이 원만하게 이뤄지면 1년 이내에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다 분쟁 조정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송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손영지 기자 sonumj301@

국민연금, LG전자 지분율 10%로 확대

>> 1면 '평균근속'서 계속

한편 임원을 제외한 직원 평균 연봉은 2018년 기준 남직원인 8700만원, 여직원이 6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3분기까지 남직원이 6700만원, 여직원이 4990만원을 수령했다.

◆지분율 늘린 국민연금

LG전자는 지난해 3분기 기준 총자산 27조8650억원, 매출액 23조3150억원을 기록했다.

LG그룹 67개 계열사 중 각각 21.51%, 23.71%를 차지하고 있다. GS그룹이 법적 분리된 2005년 이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LG그룹 67개 계열사 중 일등 자리를 지켜왔다. LG디스플레이(20.89%), LG화학(18.32%), LG유플러스(10.77%) 등이 총자산 부문에서 뒤

를 잇고 있다.

LG전자의 최대 주주는 33.67%를 보유한 LG그룹 지주사 ㈜LG다. 국민연금이 10%,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미국 블랙록이 5.04%로 뒤를 이었다. 개인 중에서는 지난해 11월 퇴진한 조성진 전 LG전자 부회장이 1만6031주(0.01%)를 보유하며 가장 많았다.

국민연금의 LG전자 지분율은 2018년 말 9.09%로 10%를 밑돌았지만 그때보다 0.91%포인트 늘어났다. 보유 가치도 2018년 말 약 9650억원에서 1조 1700억원까지 증가했다.

LG전자 주가는 지난해 6월 8만원대였지만 지난 14일 기준 6만7000원이다. 메리츠증권증권은 LG전자의 적정 주가로 9만원을 제시했다.

/송태화 기자 alvin@

직장서 밀려난 '비자발적 퇴직자' 49만명

추경호 의원실, 연도별 퇴직자 분석

전체 비자발적 퇴직자 2.8만명 줄어 40~50대 3.2만명 ↑ 5년 만에 최대

연도별 퇴직자는 매년 12월 조사기준으로 당해연도에 퇴직해 12월 조사시점까지 실직 상태인 경우를 말한다.

통계청은 이직사유를 총 11개 문항으로 조사하는데 그 중 ▲직장의 휴업·폐업 ▲명예·조기퇴직, 정리해고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부진 등 4개 항목을 고른 경우를 '비자발적 퇴직'으로 분류한다.

지난해 우리 경제의 '허리'인 40대와 50대의 비자발적 퇴직자가 49만명에 육박하며 5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40대의 비자발적 퇴직은 직장의 휴·폐업,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부진 사유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도별 퇴직자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0~50대 비자발적 퇴직자가 48만9000명으로 지난 2014년(55만2000명) 이후 5년만에 최대치라고 밝혔다.

40~50대 비자발적 퇴직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69만6000명)부터 2017년(40만6000명)까지 줄곧 감소했다가 2018년 45만7000명, 2019년 48만9000명으로 2년 연속 늘었다.

지난해 전체 비자발적 퇴직자는 2만 8000명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40대~50대는 3만2000명 증가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